

공공기관 고강도 구조조정...“호화청사 매각”

尹 “경제 비상상황인데 공공기관 과하게 방만” “청사 매각해 임대료 돌려 비용 절감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지금 경제가 비상상황인데 공공기관이 과하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사무실 매각과 연봉 반납 등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공공기관 혁신”을 놓고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말미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으로 보고 느낀 것”이라며 이같이 고강도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공공기관 사무실 규모, 호화 청사, 임원 고연봉

등이 방만 경영의 사례로 지적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너무나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하게 매각하고 임대료 돌려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고연봉 임원은 스스로 받던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를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자산 매각 구조조정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절약해서 이 국민들, 특히 어려운 사람한테 돌아가야 한다”며 “기재부가 TF를 만들어 이런 비용을 국고로 환수해 소외받고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며 “이런 비상 경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절약하는 걸 보여주면 국민도 우호적 시각으로 보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또 “서구 선진국의 공공기관은 겸소하고 작은 모습으로 운영하는데 우리도 배웠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뤄진 토론회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해 발제를 하고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냈다.

추 부총리 발제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 수는 350만명, 인력 44만명, 예산은 국가 예산의 1.3배에 이르는 761조원 수준이다.

고강도 공공기관 혁신 필요성이 제기된 때는 지난 5년간 공공기관 규모와 함께 부실 역시 급증했다. 기관 수 29개, 인력은 11만6000명이 늘었고 부채는 84조 증가했다.

추 부총리는 이같은 방만 경영을

지적하며 “고비용 저효율 문제가 만연하고 이는 갈수록 심각해진다는데 문제의식이 있다”며 “(공공기관)직원 보수가 대기업보다 높은 상황인데, 생산성은 하락하고 수익으로 빌린 돈의 이자조차 지급 못하는 공기업은 물론 출자 회사 절반은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방만 경영 외에도 심야시간 법인카드 부정사용과 독서실에서 승진시험 공부 등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사례도 들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말하면 공공기관은 이제 강도 높은 혁신을 해야 한다”며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공기관 파기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회의 토론 후 ‘공공기관 구조조정에는 인력 감축, 통합, 민영화도 포함된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민영화 얘기는 안 나왔다”고 답했다.

심판대 오른 ‘이준석 징계’ 어떤 결론이든 후폭풍

국회의원 이준석 당대표의 성 상납 무마를 위한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심사가 21일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론 전체가 윤리위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에선 당대표의 윤리위 회부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당 내에선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정치적 후폭풍이 거세게 불 것이라게 중론이다.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에 따라 당내 역학구도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여론의 권력구도가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될 지도 관심이다.

이 대표는 성상납 무마를 위한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22일 당 윤리위의 심판대에 오른다. 이 대표가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핵심 측근인 김철근 정무실장을 통해 성접대 제공자 측에 대한 회유를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거액의 투자 약속 각서를 쓰게 하는 등의 증거인멸 의혹이 징계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다.

당규에 따르면 징계 종류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4 단계로 구분된다.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 윤리위는 만장일치 결론이 안 날 시 과반(5명) 출석에 과반(3명) 찬성으로 징계를 결정한다.

‘홍준표 vs 강기정’ 영호남 대표도시 시장들 최초 토론



홍준표 강기정

‘달빛등롱’으로 유명한 영·호남 대표도시 시장들이 두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 최초로 토론한다.

21일 광주지역 정가와 방송가 등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당선인과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은 이날 오후 11시30분 방송되는 MBC 100분토론 ‘홍준표 vs 강기정, 두 도시 이야기’에 출연해 지방도시 소멸 문제를 놓고 해법찾기에 나선다.

광주와 대구는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치적 본진, 뒷받침이라고 할 수 있지만 두 도시 모두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두 당선인은 두 도시가 직면한 위기를 진단한 뒤 이를 돌파할 개혁과 연대를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누리호 발사 성공에 박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누리호 발사 성공 결과를 보고 받은 후 밝은 표정으로 박수치고 있다.

“훨씬 더 후퇴했다” 여야 원구성 협상 25분만에 결렬

與, 서해 공무원 대통령기록물 열람 요구하자 野 반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위해 다시 만났지만 또 다시 점점 찾기에 실패했다.

국민의힘 송언석·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국회 운영위원장에서 회동을 가졌지만 협상 시작 25분 만에 진 원내수석이 자리를 뜨면서 결렬됐다.

여야는 그동안 법사위원장직 배분, 국회의장 우선 선출, 법사위의 체제·자구심사 가능 조정,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등을 놓고 협상을 벌여 왔지만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양당 원내수석은 전날에도 1시간

가량 회동을 가졌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바 있다.

특히 이날 회동에서 국민의힘은 원 구성 외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에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원내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로 논의를 하면 뭔가 조금 더 좁혀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오늘 만났는데 국민의힘 입장은 전혀 변화가 없었다”며 “오히려 오늘은 새로운 제안을 하시는 가 하면 훨씬 더 후퇴된 입장을 말씀하셔서 길게 말씀을 나눌 여지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는 다수 의석을 바

탕으로 국회 의장단을 단독으로라도 선출해서 원구성을 밀어붙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협상에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경우 오는 23~24일 예정된 의원 워크숍에서 최종 대응 방안이 정리될 전망이다.

진 원내수석은 “의원들 여론을 들어 봐야 한다. 어차피 의원 워크숍이 예정돼 있으니 그런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반면 송 원내수석은 “민주당에서는 원구성이냐고 하는 본질 이외에 다른 전제조건을 이겨서 많고 얘기해 왔다”며 “원 구성과 직접 관련 없는 전제조건은 별도로 다시 논의하는 장을 만들자고 했는데 오늘도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전제조건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했다”고 협상 결렬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적정 실태 생계비 80% 수준·전년 18.9% 인상”

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21일 제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주축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노동계 최초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9160원) 대비 1730원(18.9%) 많은 것이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은 227만6010원이다.

노동계는 “금일 요구안은 산출된 적정 실태 생계비인 시급 1만3608원(월 284만4070원)의 80% 수준”이라며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제출했고, 단계적으로 달성해가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저

임금 결정기준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이다. 이 중 근로자 생계비는 그간 ‘비혼 단신 생계비’만 고려돼 왔는데,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이들은 그러면서 “노동계가 올해 처음으로 적정 실태 생계비로서 가구 생계비를 연구해(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심의에 활용해 최저임금 인상의 현실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 근거로 최근의 고물가 등 경제위기 상황도 들었다.

근로자위원들은 “코로나19 이후 저성장 고물가의 스테그플레이션 등 경제상황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어 소득이 낮은 계층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며 “양극화 및 불평등 예방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했다.

행안부에 경찰 지휘조직 신설...직접 통제 나서

경찰 지휘·인사·징계...자문위 “통제 권고”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 신설, 경찰청장 지휘 규정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21일 발표했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황정근 변호사·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정웅석 서경대 교수·강욱 경찰대 교수·정승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윤석대 전 한남대 객원교수 등 6명의 민간위원과 행안부 차관 및 기초실장,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이 참여했다. 지난달 13일부터 6월10일까지 총 4차례 회의를 개최해 권고안을 마련했다.

자문위는 관련 법들이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청장을 비롯한 고위직 경찰공무원 인사와 징계 등 권한을 부여하고 다양한 역할을 규정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해진 상태라며 권

고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더해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경찰권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각종 경찰제도와 경찰 임무수행 역량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찰위원회를 통해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을 꾀했지만,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자문위는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방안으로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정 제정 ▲경찰 인사절차의 투명화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먼저 자문위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과 관련해 법령 발의·제안, 소속청장 지휘, 인사제정, 국가경찰위원회 안건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으며 관련 조직 설치를 권고했다.

與,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폭 30%→50% 확대

물가특위 2차 회의...개정안 곧 제출 예정

국민의힘은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노력을 뒷받침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적용 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현재 5만인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추가로 5만1 증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물가특위)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물가·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유류세와 할당관세, 수입품 가격 등항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 특위 위원들과 물가 및 민생 안정을 위한 관련법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

최강욱 징계 놓고 野 시끌...“처벌회 해체” vs “빨집”

박지현 “무거운 처벌 아냐”...안민석 “尹 정권 아픈 이 빨아”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희롱성 발언 의혹으로 최강욱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21일 당내 의견이 나뉘며 시끄러운 모양새다. 최 의원을 비호하는 목소리가 우세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최 의원이 속한 처벌회를 겨냥한 비판까지 나온다.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거짓과 위선, 폭력과 증오로 당을 위기에 빠트리는 강성 팬덤 대신 국민 결의로 조금 더 다가선 결론을 내린 것이라 여긴다”며 “하지만 아쉽다. 최 의원의 거짓 발

언, 은폐 시도, 2차 가해 행위를 종합해 봤을 때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은 무거운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윤리심판원 결정은 사건 정황과 피해자 진술을 기반으로 내린 객관적 결론”이라며 “이제라도 최 의원은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처벌회는 해체해야 한다”며 “당도 최 의원 처벌을 계기로 팬덤 정치와 완전히 결별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과 달리 당내 대부분의 메시지는 최 의원을 두둔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작금의 시국에서 진보 정치인의 성희롱이라는 낙인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는 삼척동자도 안다”며 “내용을 잘 모르는 시민들은 이 징계로 인해 최강욱 의원에 대해 씻을 수 없는 성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으로 왜곡,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의 징계로 윤석열 정권의 최전방 공격수를 민주당이 스스로 제거하는 아리석은 짓을 범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아픈 이를 민주당이 알아서 빨아줬으니 ‘빨집’도 이런 ‘빨집’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호 메 민 평

